

경북도-대구, 행정통합 '연속추진' 공식 합의

정부 지원 발표 후 통합 확인
통합특별시 지원·인센티브 가속
신공항 중심 교통·산업기반 강화
AI·로봇·바이오 미래산업 육성
낙후지역 소외방지·균형발전 촉구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후 3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20일 오후 3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와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 가칭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한 바 있다.

양 시도는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며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재차 제시한 만큼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방시

대'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대구·경북이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 왔고, 이 같은 논의 성과가 충청·호남권 등 다른 권역의 통합 논의에도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양 시도는 정부 재정 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에 그치지 않고 지방이 포괄적이고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

에 주목하고 있다. 재정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경우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교통·산업·정주 기반을 함께 끌어올리고,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투자와 동해안권 전략 개발, 광역 전철망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울러 미래모빌리티, 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 미래산업을 통합된 전략과 투자 아래 병행 육성해 대구·경북의 성장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통합 추진 과정에서 경북 북부 지역 등 낙후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균형발

전 대책이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을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통합을 통해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아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뒤 통합 추진을 위한 의결 절차를 밟고, 시·군·구와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양 시도는 국회와도 긴밀히 공조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 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지사와 김정기 시장대행은 "통합이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국가 차원의 낙후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고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는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광역행정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고,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해남군

해남~광주 고속도로, 12월 개통

광주~해남~완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올 12월 광주~강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다. 도로가 완공되면 해남에서 광주까지 이동시간은 기존 80분에서 50분으로 단축돼 광역도시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올해 완공되는 노선은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에서 출발해 강진군 성전면에서 남해 고속도로와 분기점(JCT)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진에서 해남 남창을 잇는 2단계 구간은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부산시

어린이 교통안전 118억 투입

부산시는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사업비 118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 수립한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4개년 계획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 확충에 나선다. 올해는 노란색 획단보도 설치와 미끄럼 방지 포장 등 시인성 강화 사업 253곳, 방호울타리 설치 24곳, 불법 주정차 단속 감시 카메라(CCTV) 5대, 보도 설치 1곳 등 총 283곳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인성 강화 사업 429곳, 방호울타리 설치 249곳, 불법 주정차 단속 감시 카메라 41대, 보도 설치 25곳 등 총 744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완료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도

고용률 63.3% '역대 최고'

경상남도는 2025년 연간 고용률이 63.3%를 기록하며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다. 이는 전년(62.1%) 대비 1.2%p 오른 수치로, 전국 평균(62.9%)보다 0.4%p 높다.

국가데이터처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경남의 취업자는 179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 1000명(2.3%) 늘었다. 2020년 60.6%를 기록한 후 지속 상승한 결과다. 성별로는 남성이 71.2%, 여성이 55.3%의 고용률을 보였으며 각각 전년 대비 1.2%p씩 올라 남녀 모두 고른 회복세를 나타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태화강역 '트램 1호선 거점' 준비

울산, 시비 55억 투입 교통개선 추진

울산시는 20일 오후 3시 태화강역에서 '태화강역 2단계 교통 체계 개선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앞으로 도시철도 트램 1호선 종착역이 될 태화강역을 울산 도시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2023년부터 진행됐다. 총사업비 55억 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했다.

울산시는 기존 산업로에서 양방향으로 들어오던 내부 도로를 길이 220m, 폭 30m 규모의 일방통행 체계로 바꿔 도로 운영 효율성과 교통 수용 능력을 높였다. 또 버스 승강장과 육교를 새로 지어 대중교통 이용객의 철도 접

근성을 개선하고 환승 편의를 크게 향상시켰다.

공사는 2024년 12월 시작돼 역사 운영 중단 없이 시민들의 협조와 철저한 공정 관리 속에서 약 1년 만에 마무리 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태화강역 2단계 교통 체계 개선 사업으로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지능형 교통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경주, 새 학기부터 '버스비 0원'

만 18세 어린이·청소년 무료 추진

경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의 요금이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무료가 될 전망이다.

경주시는 어린이·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 전액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조례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기존 교통카드를 이용해 경주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시기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로 잡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내버스 이용 실적은 어린이 18만 2,959 건, 청소년 163만 2,298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시내버스 이용요금은 어린이



경주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청소년들이 시내버스에 승차하고 있다.

800원, 청소년 1,200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연간 소요 예산은 약 31억 5,800만 원으로 추정되며, 재원은 전액 시비로 조달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는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2개월이 빠진 10개월분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경주시 거주 어린이·청소년은 지난해 말 기준 모두 2만 2,664명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칠곡군,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내달 5일 군청 3층 강당서 진행

칠곡군은 오는 2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칠곡군청 3층 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칠곡군에 따르면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민원 상담 제도다.

상담 분야는 행정·문화·교육을 비롯해 국방·보훈, 경찰, 세무·재정, 복지·노동·방송·통신,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등 전행정 분야를 맴라한다. 또 대한법률구

조공단과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이 참여해 법률 상담과 소비자 보호, 사회복지 등 전문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안내나 합의를 통해 종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행정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칠곡(경북)=김준한 기자

양산, 신중년·장년 맞춤형 고용지원 추진

40~64세 채용 기업 200만원 지급

경남 양산시는 신중년·장년층 미취업자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맞춤형 고용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된다. 먼저 신중년 고용지원금 지원사업은 40세 이상 64세 이하 신중년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이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근로자 1인당 20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 있다.

또 장년 고용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년간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분기별 최대 5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두 사업 모두 양산시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제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는 채용일 기준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양산(경남)=손병호 기자

포항시

영일대 특급호텔 건립 본격화

포항 최초의 특급호텔 건립사업이 민관 사업협약 체결과 함께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포항시는 20일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 사옥에서 영일대수욕장 공영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하나증권, 대우산업개발 등 민간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특급호텔 조성을 중심으로 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증권은 민관협력을 통해 투자에 참여하고, 금융 구조 설계와 자문을 맡아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전문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